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방향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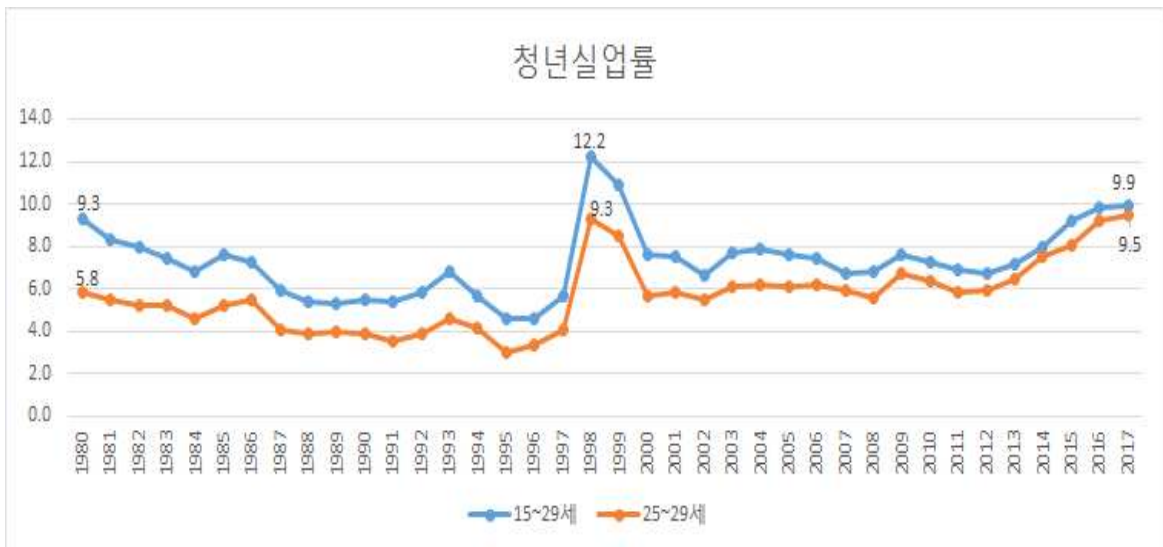
김기식 소장, 박선나 연구원
(재)더미래연구소

1. 서론

- 최근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 2017년 청년 실업률(15~29세)은 9.9%로 2012년 이후 그 수치가 상승하여 두자리 수의 실업률에 근접하며 IMF 경제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가지 대책을 내어놓았으나 실효성이 없었고, 오히려 2012년 6.7% 수준이었던 청년실업률이 2017년 9.9%까지 꾸준히 오르며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그림 1> 청년실업률 (단위: %)



<출처> 국가통계포털 및 고용노동부 연간고용동향 참고

- <그림 1>에서 보듯, IMF 시기인 1998년에는 15~29세 실업률과 25~29세 실업률차이가 2.9%p였는데, 2017년 현재는 불과 0.4%p차이로 그 간극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25~29세가 대체로 대졸 연령대라는 점에서 학력은 더이상 실업문제의 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 높은 청년실업률 문제와 더불어 노동시장에 진입 자체를 하지 못한 고학력 청년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¹⁾에 따르면, 공식 교육과 취업에서 배제된 청년(15~29세)을 “니트족”으로 일컫는데, 니트족의 구성을 보면 OECD 회원국의 경우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저학력자가 36.1%이고, 고졸자는 47.3%, 대졸 고학력자는 16.5%인 반면, 한국의 경우 저학력자가 6.8%, 고졸자는 50.7%, 대졸 고학력자가 42.5%였다.

1) 김유선. (2017).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제 10호

- 위와 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결과물로서, 아래와 같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경제성장률 10%대인 고성장시대에서 IMF이후 성장률 3%이하인 저성장시대로 접어든 문제²⁾
 - 1980~90년대까지만 해도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전체 46%였던 것에서 2017년 현재 19.8%³⁾로 그 비중이 축소된 문제
 - 노동시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신규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
 - IMF 이후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2%⁴⁾인 시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비정규직만 양산되고 있는 문제
- 현재 일자리의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수를 절대적으로 늘리고, 질을 제고시켜야 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일 것이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 미스매치⁵⁾ 문제도 심각하다. 청년들의 구직난과 대비되어 노동시장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 2017년 상반기 청년실업자는 47만 명에 달했으나, 노동시장에서는 미충원인원⁶⁾이 9만여 명에 달했다. 9만 여명 중 8만 여명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충원되지 못한 인원이었고, 중소기업의 미충원율(12.6%)은 대기업 미충원율(4.6%)보다 2배 이상 높았다.⁷⁾
 - 대기업의 2017년 상반기 미충원인원은 7천 여명이었다. 미충원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거나 다른 사업체와 인력 유치경쟁이 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인 삼성, 현대차, LG의 신입사원 중 인문계 출신 비율이 각각 15%, 20%, 15%⁸⁾였다는 사실에서 미루어보면, 이공계 인원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대기업의 상황과 대학정원의 60%이상이 비이공계인력으로 양성되는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이다.
-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그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우리사회 교육시스템과 학력구조가 이러한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는 교육시스템 차원에서 노동시장 미스매치 문제를 점검하고자 한다.

2) 국가통계포털-경제성장률(1980~2017)

3) 장하성. (2015). 왜 분노해야 하는가. 헤이박스. p. 94, 고용노동부. 2017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참고

4) 국가통계포털-시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2003~2017)

5) 학력이나 기술 등의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노동 수요와 공급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한국은행. (2015). 주요 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6) 기업의 구인인원 중 실제 채용된 인원을 제외한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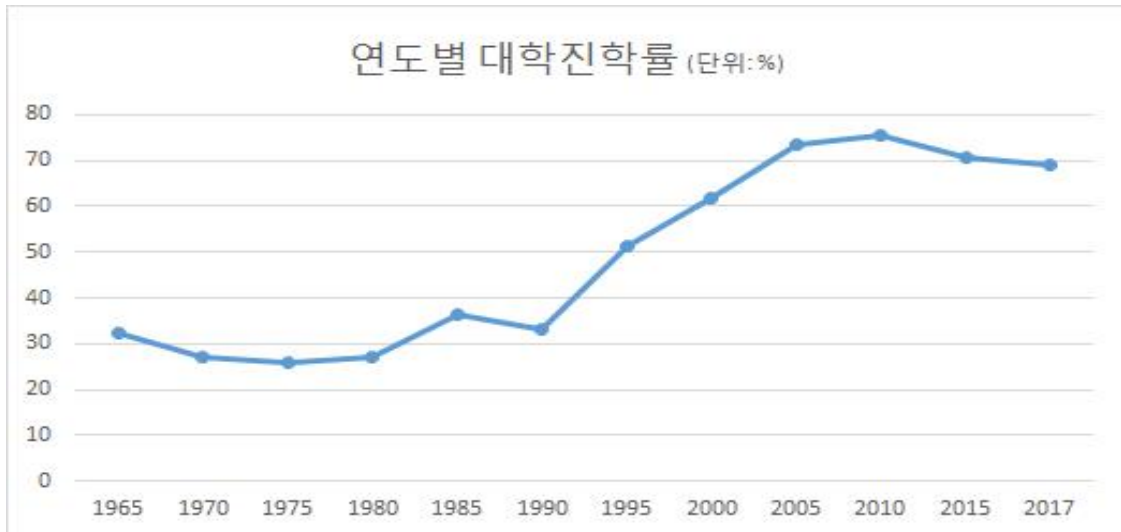
7) 국가통계포털 및 고용노동부 2017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8) 중앙일보. (2014). <http://news.joins.com/article/14128346>

2. 높은 대학진학률과 그 이유

-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고학력자(대졸 이상)가 많은 우리 사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식과 문화도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비정상적으로 고학력자가 많다.
 - 교육부가 발표한 ‘2017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6년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평균은 43%인 반면, 한국은 70%로 2008년 이래로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등교육 이수자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편인 것이다.
 - 지금과 같은 높은 대학진학률은 90년대 이후의 현상이다.
 - <그림 2>를 보면, 1990년 이전까지는 대학진학률이 40%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부터 대학진학률은 50%를 넘었고, 이후 2010년까지 80%에 육박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림 2> 연도별 대학진학률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 진학률 및 간추린 교육통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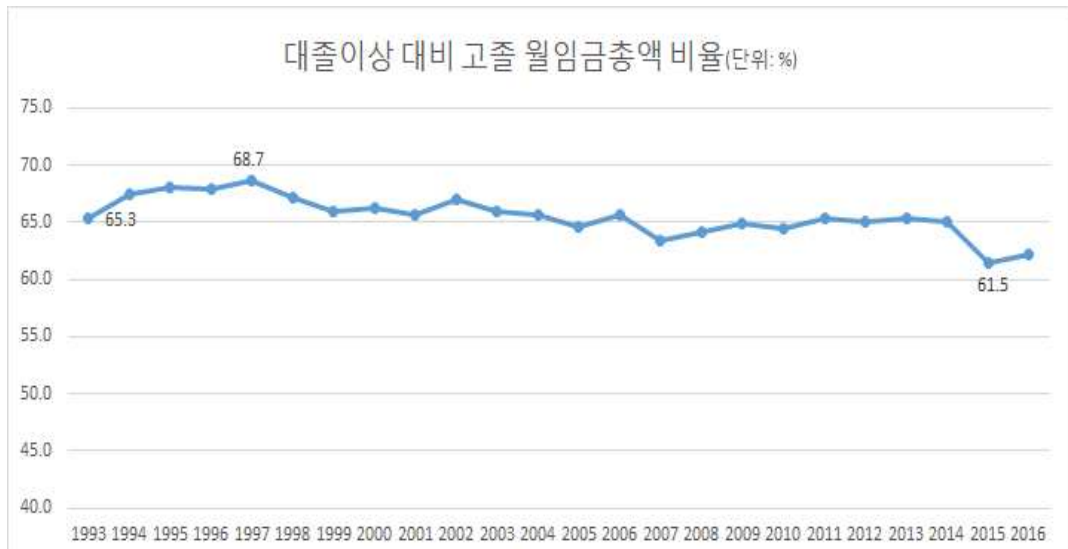
-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하더라도 1995년 이후 대학진학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1996년부터 대학을 보다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한 ‘5·31 교육개혁(1995년 1차)’ 조치 때문이다.⁹⁾
- 대학설립자유화조치가 대학진학률을 상승시킨 견인역할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대학진학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9) 대학설립 준칙주의라고 하며, 대학설립을 위한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확보 등 4대 요건 일정 충족할 경우,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의 ‘인가주의’원칙을 대체시킴(임연기 2008, p. 148). 준칙주의 도입 후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설립된 대학은 4년제 대학 42개교, 대학원대학 36개교로 총 78개교의 학교가 설립됨(임연기 2008, p. 154).

1) 임금격차

- 대졸출신이 고졸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대학진학률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듯, 학력별 임금실태가 조사된 1993년 이래로 지난 20년간 고졸의 월임금은 대졸이상의 월임금 대비 60%대 수준이다.

<그림 3> 대졸이상 대비 고졸학력자 월임금총액 비율 (단위: %)



※ 학력별 임금실태는 1993년 이후로부터 측정되어왔으며, 2006년부터는 근로자 1인 사업장까지도 포함됨. 그전까지는 3-5인 이상 상용 근로자만 대상으로 조사된 것임.

<출처> 국가통계포털-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사업체규모 및 학력별 임금 및 근로조건 참고

2) 사회적 차별

-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 대학진학률을 높인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혼인율이 더 낮다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고졸자의 혼인율은 대졸자의 2/5 수준¹⁰⁾에 불과했다. 단순히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 결혼을 기피한다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3) 높은 교육열

- 7-80년대 대학을 다닌 세대들은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첫 세대이다. 또한 대학을 진학해야 임금 조건이 보다 좋고 근로환경이 좋은 직종에 종사할 기회가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세대이다. 과거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가족형태가 변모하면서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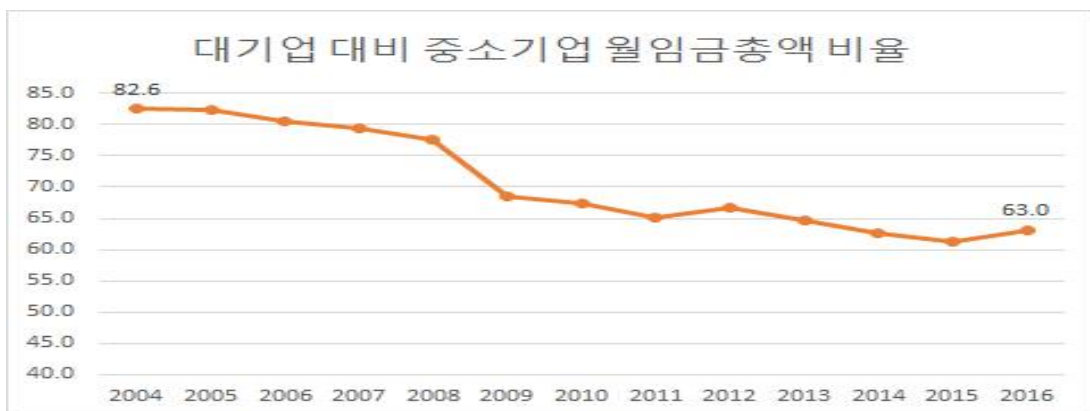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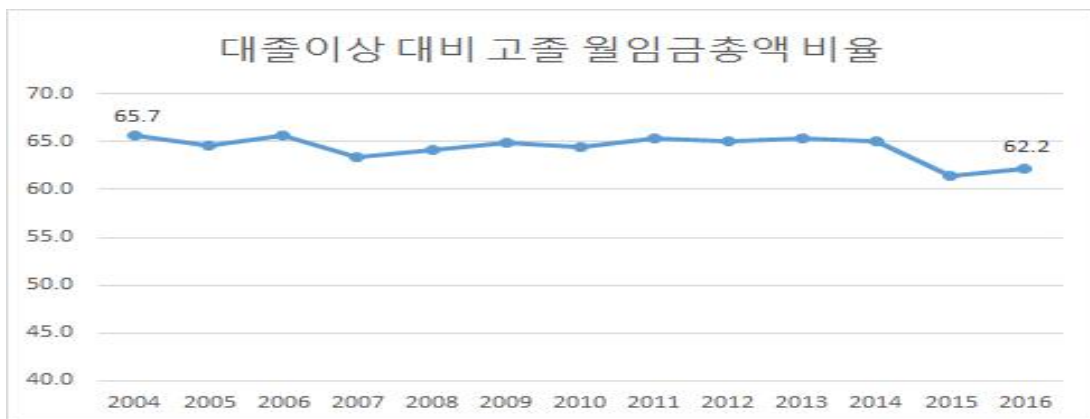
10) 통계청. 교육수준별 출생·사망·혼인·이혼 분석: 2000-2015

1~2명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세대이기도 하다. 이 세대의 자녀들이 대학입학연령에 접어든 시기가 90년대 중반이고, 같은 시기 대학 설립 자유화 조치로 대학 수가 늘어나는 상황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대학진학률이 높아진 것이다.

3. 대학 진학의 허상, 그리고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진학하고자 했던 이유는 임금 수준이 높고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이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2000년대 이후 임금격차는 학력에 의한 차이보다는 사업체규모 및 고용형태에 의한 차이가 더 큰 변수가 되고 있다.
 - IMF를 거치며 우리 사회의 고성장시대는 막을 내렸고, 완전·종신고용이었던 노동시장 구조가 무너지는 변화를 겪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학력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보다는 오히려 고용형태의 차이와 사업체규모의 차이가 임금격차의 주요변수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 <그림 4>에서 보듯, 2004년 고졸의 월임금은 대졸의 65%수준이었고 2016년은 62%로 12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종사자의 월임금은 대기업 종사자의 82%수준에서 63%수준으로 낮아지며 격차가 20%p 더 벌어졌다. 또한 비정규직의 월임금은 정규직의 65%수준에서 53.5%수준으로 격차가 11%p나 더 벌어졌다. 학력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난 기간 사업체규모와 고용형태차이에 의해 임금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2004~2016년 학력·사업체 규모·고용형태별 임금격차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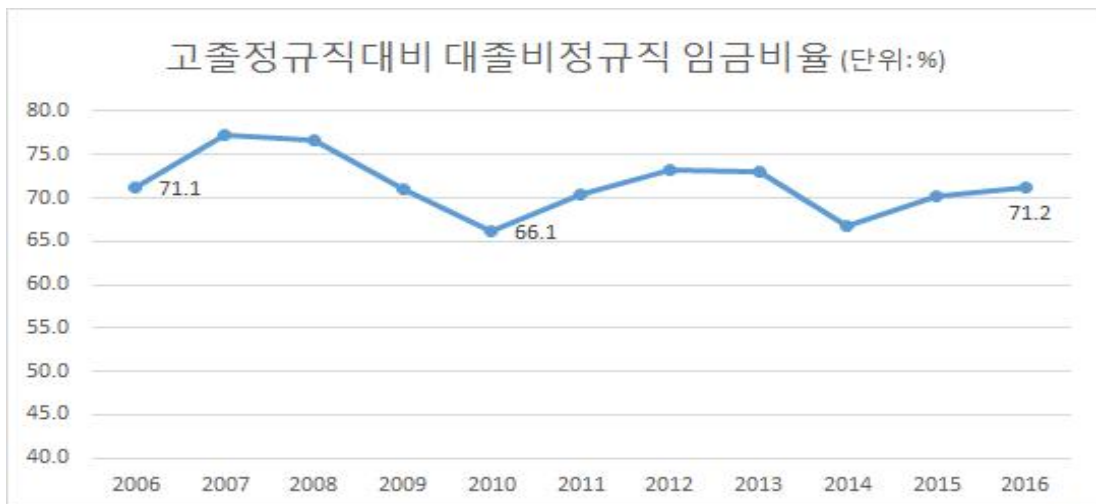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의 경우, 사업체 규모 300인 미만인 곳(1~4규모)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을 내고, 사업체 규모 300인 이상인 곳(5~6규모)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을 내어 비교함.

<출처> 국가통계포털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4~2016) 참고

- 대학을 진학하기만 하면 좋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과거의 기본 전제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첫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57.2%에 불과하다. 곧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비율이 최대 40%나 된다는 것이다.¹¹⁾ 고졸자가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비율이 2013년 기준 75.5%¹²⁾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졸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비정규직으로 취직한 대졸이 정규직으로 취직한 고졸 임금수준의 66~71%수준 밖에 안 되는 현실은 지난 10년간 지속되고 있다(<그림 5>).

<그림 5> 고졸정규직 대비 대졸비정규직 월임금총액 비율 (단위: 원)



※ 고용형태 및 학력수준에 따른 임금차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자료는 2006년 이후부터 수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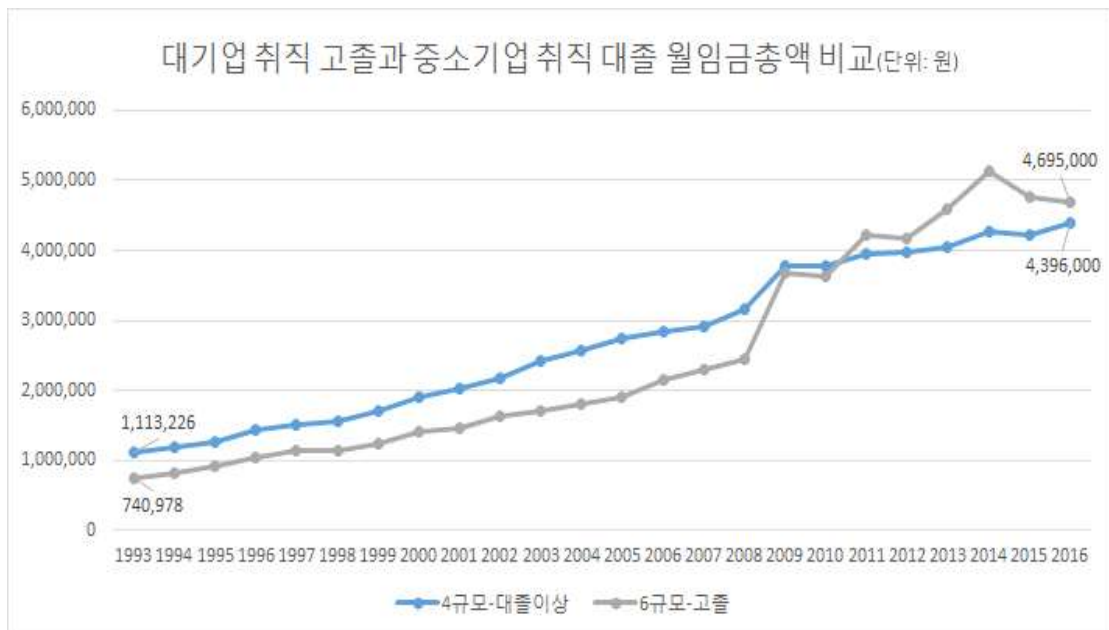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형태 및 학력별 임금

11) 한국고용정보원. 2014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4GOMS1)

12)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 또한 통계적으로 대졸이 고졸보다 대기업 취직에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다. 2014년 기준 4년제 대졸자의 25.3%만 첫 직장으로 규모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취직하고 나머지 절대다수(74.7%)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했다.¹³⁾ 한편, 고졸자는 2013년 기준 20.6%가 대기업에 취직했으며 나머지 79%가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같은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경우, 졸업생의 45.6%가 첫 일자리로 대기업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⁴⁾
- 학력수준이 여전히 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2011년 이후로 대기업에 취직한 고졸이 중소기업에 취직한 대졸보다 임금수준이 높아졌다(<그림 6>). 2016년 기준 사업체 500인 이상 규모의 대기업에 취직한 고졸의 월임금이 469만원인 반면, 사업체 10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 취직한 대졸의 월임금은 439만원으로 대기업에 취직한 고졸이 약 30만원 더 많았다.

<그림 6> 대기업 취직 고졸과 중소기업 취직 대졸의 임금격차 비교 (단위: 원)



※ 4규모-100~299인 사업체, 6규모-500인 이상 사업체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사업체 규모 및 학력별 임금

- KDI 이주호(2014)¹⁵⁾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졸자 네명 중 한명은 고졸보다 임금이 낮다. “성별과 경력별 임금격차를 통제한 후 고졸자 대비 대졸자들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4년제 대졸자의 하위 20%와 2년제 대졸자의 하위 50%는 고졸에 비해서 임금이 낮고, 고졸에 비해 임금이 낮은 대졸자 비율이 1980년 약 3%수준에서 2011년 23% 수준까지 증가했다” 고 밝혔다.

13) 첫 직장의 사업체 규모가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전문대 15.9%, 4년제 대학 25.3%에 불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인 경우 전문대 83.8%, 4년제 대학 74.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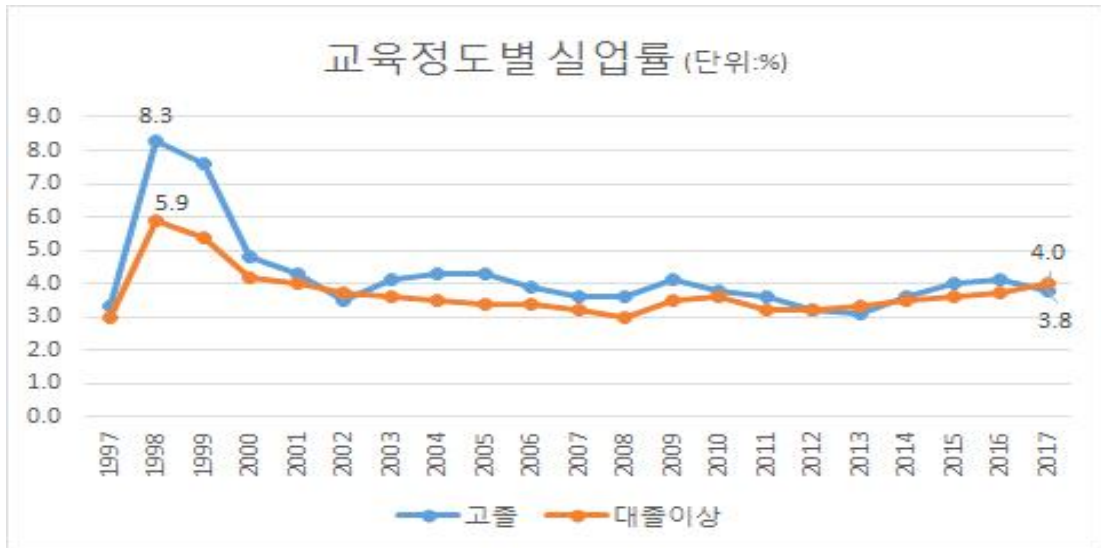
14)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15) 이주호. (2014).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KDI FOCUS

- 대학 진학의 허상은 실업률·취업률에서도 나타난다. 오늘날 대졸실업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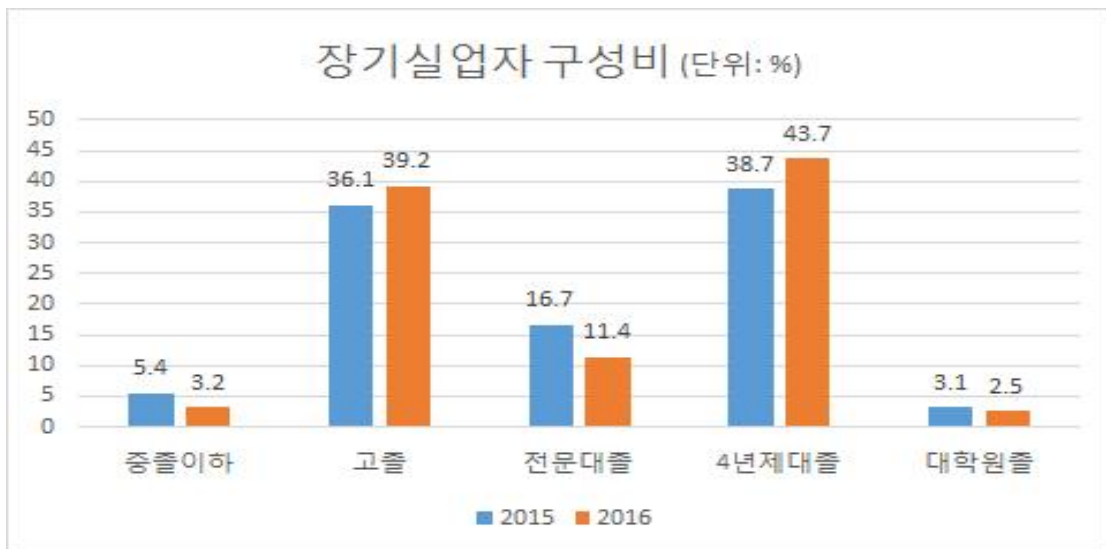
- IMF 경제위기 이래로 고졸 실업률은 대졸 실업률보다 높았는데, 2010년 이후로 거의 같아지고 있으며, 2013년과 2017년에는 대졸 실업률이 고졸 실업률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있었다(그림 7). 또한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중 4년제 대졸자 비중(43.7%)이 고졸(39.2%)과 전문대졸(11.4%) 비중보다 높다(그림 8).

<그림 7> 교육정도별 실업률 비교 (단위: %)



<출처> 국가통계포털-경제활동인구조사 및 통계청 연간 고용동향 참고

<그림 8> 2015-2016년 교육정도별 장기실업자 구성비 (각 연도 100%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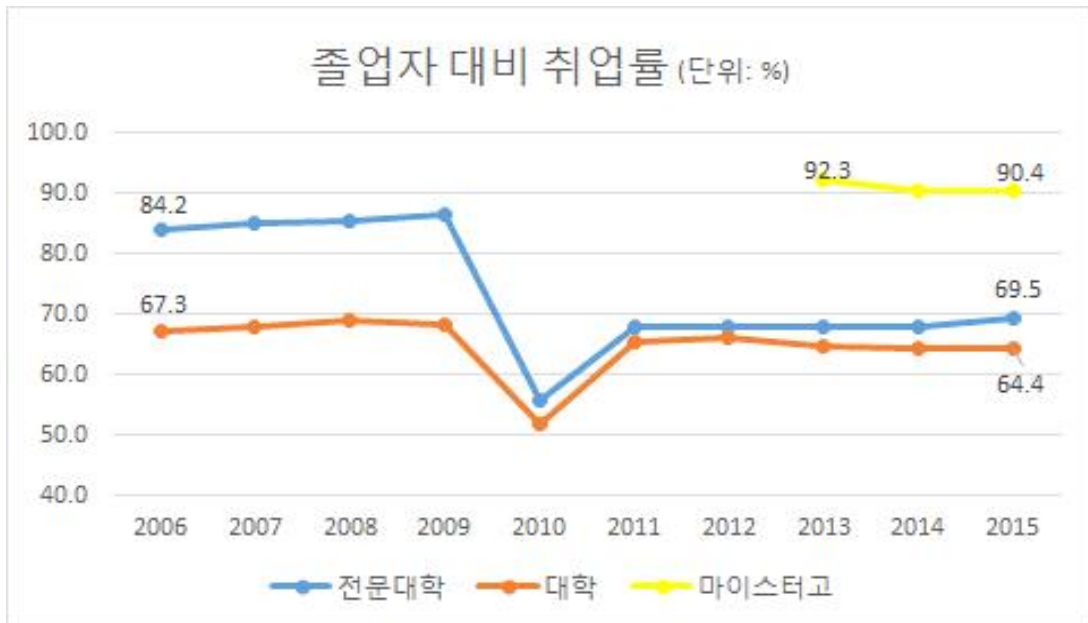


<출처> 박세정·김안정. (2016). 최근 장기실업자 현황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제 10호

- 취업률도 마찬가지다. 지난 10년간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전문대 졸업생 취업률보다 낮았다. 취업률이 높다고 여겨지던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도 최근 4년제 대학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실업률도 최근 급등¹⁶⁾하여 역대 최악의 구직난에 처해있다. 한편, 2013

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 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4년제 대졸과 전문대 취업률보다 20%p 이상 높았다(그림 9).

<그림 9> 4년제 대졸·전문대졸·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률 비교 (단위: %)



※ 마이스터고의 경우 첫 졸업생을 배출한 년도가 2013년부터임.

<출처> 전문대학과 대학 취업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통계간행물 참고

마이스터고 취업률: 교육부 보도자료(2016.10.14.). 특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률 7년 연속 상승

● 그러나 대학 졸업생들이 단순히 일자리의 절대 양이 부족하여 구직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시장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 상반기 청년실업자(15~29세)가 47만 명이고, 그 중 대학 졸업연령대인 25~29세 실업자는 26만 명에 달했지만, 같은시기 기업에서 구인한 인원을 채우지 못한 미충원인원은 9만 3천여명에 달했다. 또한 기업에서 정상적 경영을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부족인원)이 28만 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청년실업자의 반이 넘는 수치이다. 이 숫자가 매치만 된다면 청년실업자는 현재보다 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표 1).
- 이러한 미스매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체 노동시장 구인인원의 약 80%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고, 2017년 상반기 부족인원 28만명 중 26만명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미충원율은 중소기업 12.6%, 대기업 4.6%로, 중소기업의 미충원율이 대기업 미충원율보다 2배이상 높았다.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미충원인원이 발생한 1·2위 사유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거나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6) 2012년과 2016년 사이 전문대 실업률은 6%에서 7.5%수준이었으나, 2017년 9.1%로 급등했다.(매일경제. (2018.1.17.). <http://vip.mk.co.kr/news/view/21/20/1567097.html>)

<표 1> 2015년~2017년 상반기(1/4분기) 미스매치 현황 (단위: 명, %)

연도	15~29세 실업자수	25~29세 실업자수	중소기업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대기업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합계 (미충원율 평균)	중소기업 부족인원	대기업 부족인원	부족인원 합계
2017	472,000	260,000 ¹⁷⁾	85,829 (12.6)	7,816 (4.6)	93,645 (11)	262,000	24,000	286,000
2016	435,000	236,000	84,717 (12.7)	5,863 (3.8)	90,580 (11)	267,000	26,000	293,000
2015	397,000	201,000	69,901 (10.6)	4,889 (3.4)	74,790 (9.3)	238,000	21,000	259,000

※ 중소기업: 사업체 규모 300인 미만, 대기업: 300인 이상

※ 미충원인원= 구인인원-채용인원, 예를 들어 중소기업 미충원인원 85,829명은 중소기업 구인인원 682,179명에서 실제 채용된 596,350명을 뺀 수치임. 나머지는 각주 참고.¹⁸⁾

※ 부족인원: 조사기준일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

<출처> 국가통계포털 및 고용노동부 연간고용동향, 2015·2016·2017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참고

- 정부는 대졸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지원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인건비 부담으로 대졸 구직자들을 사원으로 채용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현실적 문제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한편, 대기업은 구인인원을 다 채울 수 없는 까닭이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가 대학에서 양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2000년 이후 노동시장에서 고용 비중이 20%이하로 축소된 대기업의 경우에도 구인하기로 한 인원조차 다 채우지 않고 매해 5천명 이상 미충원인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 이공계 인원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기업 상황과 달리 대학에서 양성되는 인원의 다수가 인문계열이라는 수요와 공급간의 미스매치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 종합하면, 청년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 수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억제 하는 등 일자리 질을 제고하는 노력과 함께 교육시스템상의 인력양성 구조와 노동시장간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17) 25~29세 실업자 26만명 중 중졸이하의 3천명, 고졸은 7만 2천여명, 전문대졸은 4만 9천명, 전문대를 제외한 대졸이상은 13만 6천여명으로 대졸이상의 실업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연령/교육정도별 실업자).

18) 2017년 미충원인원 계산에 필요한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중소기업 구인인원(682,179), 채용인원(596,350), 대기업 구인인원(168,133), 채용인원(160,317)

2016년 미충원인원 계산에 필요한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중소기업 구인인원(666,862), 채용인원(582,145), 대기업 구인인원(152,916), 채용인원(147,053)

2015년 미충원인원 계산에 필요한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중소기업 구인인원(658,095), 채용인원(588,194), 대기업 구인인원(142,380), 채용인원(137,491)

4. 비정상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유도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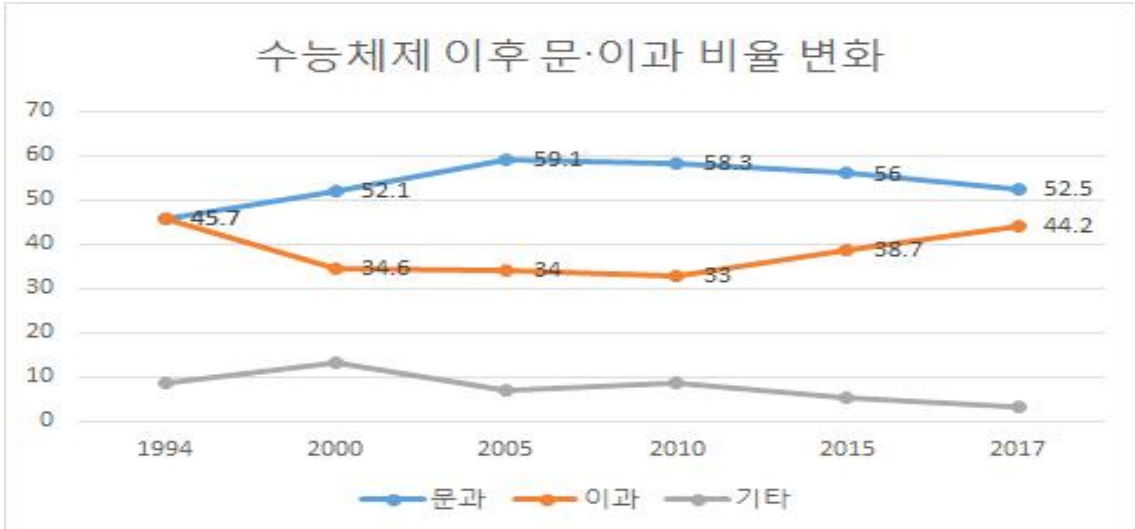
- 청년 구직난과 기업 인력난이라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임금격차, 처우, 고용안정성 문제 등 복합적이다. 그러나 일자리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고학력 구조, 문과편중의 인력양성구조라는 학력구조 및 교육시스템의 문제도 미스매치 문제의 한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 역대 정부와 정치권은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인식해왔으나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금기시해왔다. 엄연히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년실업문제가 무리하게 대학에 진학한 청년 개인들의 문제인 것처럼 정부가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어 공론화 하지 못한 것이다.
- 그러나 노동시장에 일자리의 양과 질의 문제 못지않게 미스매치 문제가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 교육시스템 및 학력구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가 취업이고, 청년 취업률의 제고는 청년 정책의 핵심이다. 대학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가는 고학력사회에서 고학력 실업자와 높은 실업률이 발생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1. 고교시스템 개혁-문·이과 통합 및 교육과정 난이도 조정
2. 대학정원조정-이공계 비중 확대
3. 직업교육 확대 및 직업계 고등학교 지원 강화

1. 고교시스템 개혁-문·이과 통합 및 교육과정 난이도 조정

-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이후, 이과기피현상은 심화되어 왔다.
 - 최근 인문계의 극심한 취업난으로 2015년부터는 수능시험에서 점차 자연계 응시생이 늘어나고 있으나 지난 20년간 응시생의 5~60%가 문과생이었으며, 이과생은 전체 30%대 수준에 불과했다(<그림 10>). 1995년을 기점으로 대학진학률이 상승했는데, 입시에서 문과생보다 이과생 비율이 훨씬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고교와 대학에서 인문계 중심으로 인력이 과대양성 되어왔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림 10> 대학입시생 중 문·이과생 비율 (단위: %)



※ 기타는 직업탐구 응시생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과기피현상이 심해진 가장 주된 배경은 학생의 다수가 수학·과학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재의 과도한 입시 부담 때문이다.
 - 고등학생의 60%가 수포자(수학포기자)라는 통계¹⁹⁾가 있다. 심지어 이과를 선택해도 수학공부의 부담으로 정작 수능시험에서는 인문계 수학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이 지난 3년 평균 35%²⁰⁾정도이다.
 - 게다가 7차 교육과정 이래로 문과생들은 수능시험에서 과학 시험을 보지 않게 되었다. 입시체제로 운영되는 고교기간 동안 문과생들은 과학 공부의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결국 문과생들이 이공계로 대학을 진학하거나 취업시장에서 이공계 계통의 일자리에 지원하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고교단계에서 문·이과 구분을 없애기로 했고, 2018 학년도부터 문·이과 통합 교과과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입시체제로 운영되는 고교교육의 특성상 개정된 교과과정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시개편안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²¹⁾ 그러나 문·이과가 통합되어도 어려운 수학·과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대학 진학시 이공계진학을 기피하는 현상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입차원에서 수학과 과학의 난이도를 낮추는 교육과정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19)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실시한 ‘수학교육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조사 결과’ (주간조선, (2015.8.10.).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36910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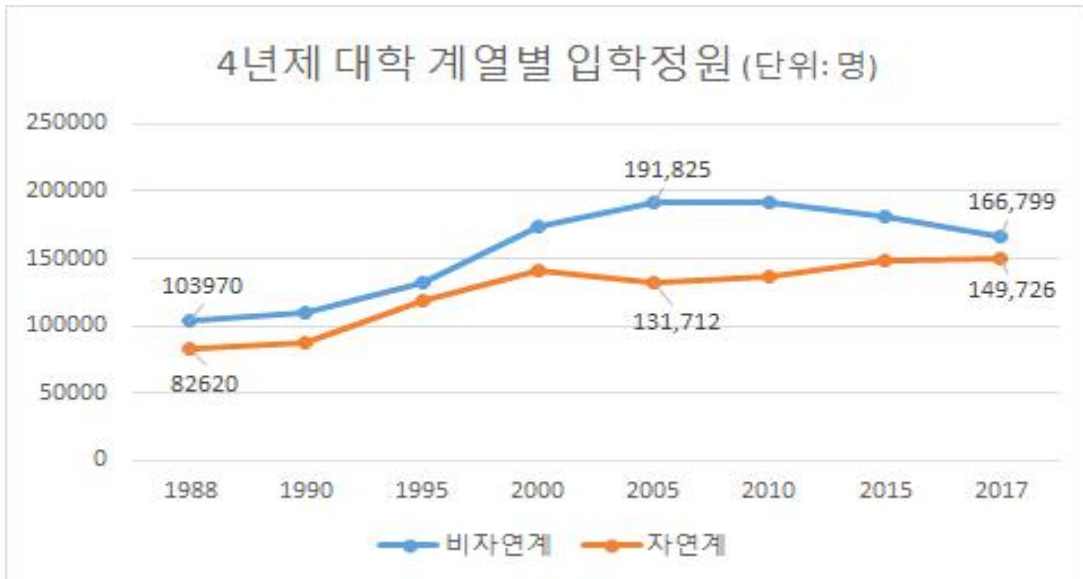
20) 조선일보. (2017.4.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3/2017042301432.html?rsMobile=false

21) 2017년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수능개편안 시안은 1년 유보되었고, 2018년 중순에 다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 대학정원조정-이공계 비중 확대

-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대학 본연의 존립 목적은 아니지만, 그동안 한국 사회는 과도하게 많은 ‘종합대학’ 중심의 대학체제 하에서 비자연계(인문·사회·교육·예체능 계열 통칭) 인원을 과잉 양성해왔다.
- 1995년 이전까지는 4년제 대학의 비자연계 정원이 10만명, 자연계 정원이 8만명이었으나, 1995년 이후 대학 수가 급증하면서 비자연계 정원이 자연계 정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2005년에는 비자연계와 자연계 정원의 차이가 최대 6만명까지 났다. 2010년을 기점으로 비자연계 정원이 줄고, 자연계 정원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비자연계가 만 7천여 명 정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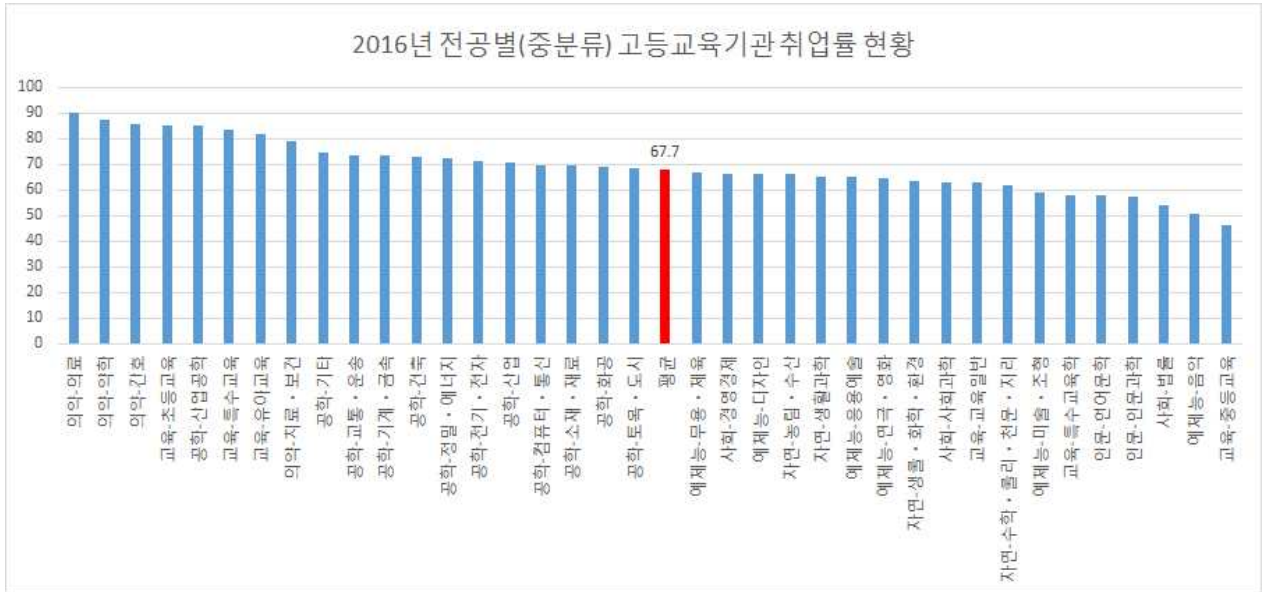
<그림 11> 4년제 대학 계열별 입학정원 (단위: 명)



※ 자연계는 의학·자연·공학계열의 합산, 비자연계열은 인문·사회·교육·예체능 계열 정원 합산.
 ※ 87년 이전 자료는 대학입학정원이 아니라 편제정원(학교전체정원)으로 기록되어서 비교하기 어려움.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각년도 교육통계연보-대학 입학정원 참고

- 앞서 언급했듯이, 주요 대기업의 신규채용자 중 인문계 출신이 15%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었듯, 인문·사회계 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자연계 학과 졸업생 취업률보다 모두 낮다.
-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그림 12>), 평균 취업률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인 학과는 모두 의학(83.4%)·공학(71.6%)계열이었으며, 평균 취업률 보다 낮은 취업률의 학과는 인문(57.6%)·사회(64.7%)계열이 대다수였다.

<그림 12> 2016년 전공별(중분류)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현황 (단위: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7.12.29.). 2016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참고 재가공

-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역대 정부는 대학 정원 내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해왔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대학구조조정의 결과 2016년 기준으로 공학계열 대학 정원은 2008년 대비 전체 만 명 정도가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인문/사회계열은 만 명이 축소되었다.²²⁾ 현재 교육부는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산업연계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PRIME사업)’으로 21개 대학에서 인문·사회·자연·예술 계열 정원은 줄이고, 공학계열 정원은 늘리는 방향으로 학과 통폐합을 추가적으로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현재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2017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2020년 전후 시점에도 비자연계 인력이 자연계보다 만 7천여명 더 많다. 그런 점에서 비자연계 정원은 축소하고, 이공계 정원을 증원하는 정책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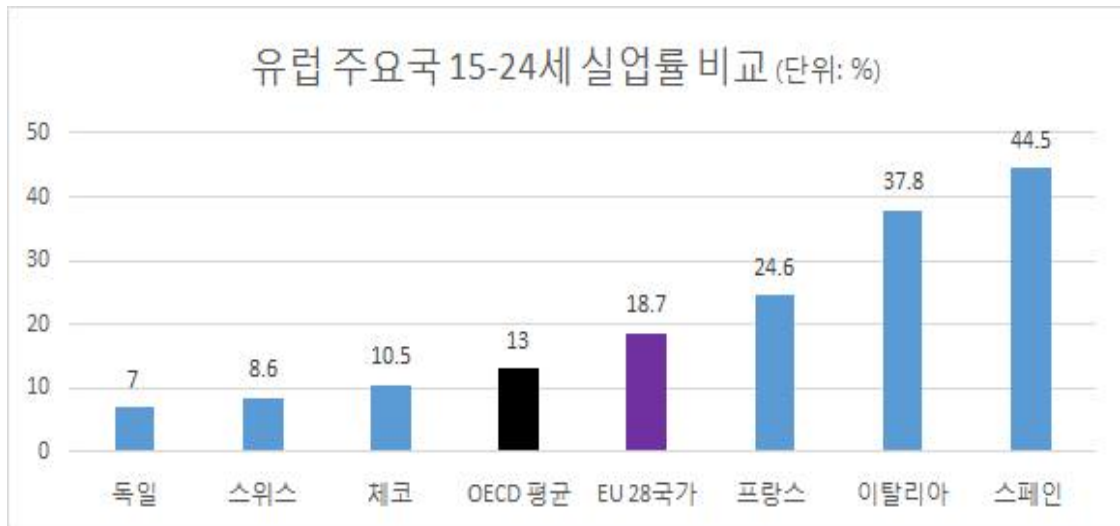
22) 안민석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통계로 본 대학구조조정 실패의 민낯

3. 직업교육 확대 및 직업계 고등학교 지원 강화

고교단계에서부터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직업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경제적으로 선진국가인 유럽 국가의 청년층 실업률은 평균 18.7%로 OECD 평균 수치 13%보다 높은 편이다. 그 중, 독일(7%)·스위스(8.6%)·체코(10.5%)는 OECD 평균 수치보다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프랑스(24.6%)·이탈리아(37.8%)·스페인(44.5%)은 청년 실업률이 OECD 평균 수치 및 EU28개 국가 평균수치보다 높다. 전자의 국가들은 고교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 비중이 높고, 견습생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공통점²³⁾이 있다.

<그림 13> 2016년 유럽 주요국 15~24세 실업률 (단위: %)



<출처> OECD, 2016 Youth Unemployment Rate 참고

- 그런 점에서 한국도 마이스터고 확충 및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고교단계에서 직업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고교 졸업 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고교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대학 진학의 필요성은 줄어들 것이고, 한국의 대학진학률도 OECD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이다.
 - 이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2009년 16.7%에서 2017년 50.6%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대학진학률은 2009년 73.5%에서 2017년 32.5%로 감소했다.²⁴⁾ 특히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은 2013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로 매해 90%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 현재 전체 고등학교 중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계 직업반)는 25%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⁵⁾ 그 중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대한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실업과 관련해 내어놓은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2016, vol.18)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교육과 직업이 밀접한 관계(예-독일: 낮은 경제성장 불구 직업·도제교육 활성화)를 보인 반면, 높은 청년실업률을 가진 국가들은 교육과 직업 간의 고리가 튼튼하지 않다(예-프랑스: 고졸자 대부분이 직업경험 갖지 못한 채 졸업)고 지적한바 있다.”

24) 교육부 보도자료(2017.11.20.). 2017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

25) 교육부 보도자료(2016.10.1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률 7년 연속 상승

- 특성화고는 현재 46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및 기타 지원금으로 1,598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현재 4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426억 원의 운영지원을 받고 있다. 특별히 마이스터고를 설립할 때 교육부는 50억원의 준비금과 개교 후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9~1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2> 시·도 교육청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운영 및 지원 현황

2017년	특성화고(직업교육)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학교 수	466교 (공립: 268, 사립: 198)	46교 (국공립: 41, 사립: 5)
학생 수	271,446명 (공립: 143,635, 사립: 127,811)	18,492명* (국공립: 16,047, 사립: 2,445)
운영지원	약 370억원	약 426억원
기타지원	약 1,228억원 (특성화고교육내실화 및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교육부지원: 마이스터고 설립시(국공립/사립 모두 해당) 준비금 50억원 지원, 개교후 운영지원비 9~11억원 추가 산정 ²⁶⁾

*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서는 경남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마이스터고)에 대한 현황파악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어서, 본 학생수는 이를 제외한 45교의 학생 수임.

<출처> 학교수 및 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통계연보 참고

운영지원 및 기타지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17 사업별세출 참고

직업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은 1)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고, 2)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1) 마이스터고 확대

- 교육부가 초기 설정한 마이스터고 설립 목표 수는 50곳이었고, 이미 2017년 기준 49곳이 지정된 상태이지만, 앞으로 100곳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 중 마이스터고 비중은 8%에 불과하다.
- 현재도 대부분의 마이스터고가 기존 특성화고에서 전환된 형태이지만, 앞으로 학생수 감소 추세에 맞추어 마이스터고를 새로이 증설하는 것보다는 특성화고 중 일부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학비가 모두 면제되는 혜택이 있으므로, 마이스터고가 확대되는 것은 현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추진 계획과도 조응한다.

2)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 강화

- 한편 마이스터고처럼 의료, 에너지, 반도체 등과 같은 산업수요에 보다 특화된 학과 학생들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계, 복지, 미용 등 일반 직업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육성할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26) 교육부 설명자료(2015.4.16.). 「마이스터高, 정권 바뀌니 ‘찬밥’」 관련 설명 자료

- 현재까지는 마이스터고에 정부 지원이 편중²⁷⁾되어 소수의 마이스터고에는 우수 학생들이 몰리며 경쟁이 발생하는 반면, 특성화고등학교는 과거의 실업계·전문계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아직까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성화고가 인문계고등학교를 가지 못해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아니라 인문계학교와 함께 고교체제의 양 날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사의 질 제고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일각에서는 대학의 취업연계강화 및 고교단계에서의 직업교육 강화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직업훈련기관도 아닐뿐더러 엄연히 대학을 나온 이들과 나오지 않은 자 간에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대학진학률을 낮추려는 시도는 결국 중산층 이하의 교육받을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전인교육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 그러나 대학진학률이 50%가 안되는 OECD 주요 선진국, 예를 들어 독일(30.5%)·핀란드(41%)·프랑스(44%)²⁸⁾에서 학생들의 교육받을권리와 전인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독일은 심지어 초등교육만 마치면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업학교 및 종합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학교를 직업연계기관으로 이해해서 이러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력·학벌이 중시되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청년들은 대부분 대학에 ‘묻지마진학’을 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 취업이 최대 관심사인 현 세대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육받을 권리·전인교육만을 내세우는 주장은 탁상공론일뿐이다.
- 2010년을 기점으로 대학진학률이 70%이하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다. 취업률을 제고 시키고, 대학교육은 취업 후 언제라도 갈 수 있는 평생교육시스템 차원에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더 많은 이들을 대학에 가게 하여 고등실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지 않아도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교육시스템개혁은 더욱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27) 2011학년 학생 1인당 지원금이 마이스터고는 649만원, 특성화고 지원금은 453만원인 것에 비해 약 1.4배 많음(베리타스알파. (2012.10.5.).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52>)

28) OECD Data. <https://data.oecd.org/eduatt/population-with-tertiary-education.htm>

[참고문헌]

OECD Data.

고용노동부. 2017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교육부 보도자료(2016.10.1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률 7년 연속 상승

교육부 보도자료(2017.11.20.). 2017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

교육부 설명자료(2015.4.16.). 「마이스터高, 정권 바뀌니 ‘찬밥’」 관련 설명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kr

김두순. (2017). 임금근로자의 직장안정성분석.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

김원규. (2017).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김유선. (2017).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제 10호

박세정·김안정. (2016). 최근 장기실업자 현황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10호

박진희 외. (2016). 2016 통계로 본 노동동향. 한국고용정보원 기본연구

안민석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통계로 본 대학구조조정 실패의 민낯

유길상. (2016).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완화하려면. 한국고용정보원 THE HRD REVIEW 3월호 시론.

이주호. (2014).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KDI FOCUS

임연기. (2008). 대학설립 준칙주의 공과분석. 교육행정학회.

장하성. (2015). 왜 분노해야 하는가. 헤이박스

최경수 외 2016. 기업성장의 동태성과 청년일자리. KDI

최기성외. (2016). 2014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청 보도자료. (2017.7.19.). 2017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교육수준별 출생·사망·혼인·이혼 분석: 2000-2015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2014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4GOMS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글로벌사회정책 브리프 vol.18

한국은행. (2015).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인터넷 언론기사]

매일경제. (2018.1.17.). <http://vip.mk.co.kr/news/view/21/20/1567097.html>

베리타스알파. (2012.10.5.).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52>

조선일보. (2017.4.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3/2017042301432.html?rsMobile=false

주간조선. (2015.8.10.).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369100004>

중앙일보. (2014). <http://news Joins.com/article/14128346>

더미래연구소 IF REPORT 2018-01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방향 검토

발행일 2018. 01. 29

발행처 (재)더미래연구소(이사장: 정세현)

Copyright ©더미래연구소, 2018 ※본 자료는 더미래연구소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더미래연구소는 대한민국의 '더 좋은 미래' 를 만들어 가는 '독립 민간 싱크탱크' 입니다.
더미래연구소의 성장은 '후원회원' 의 힘과 꿈으로 가능합니다.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903호(여의도동, 정원빌딩)

T: 02-785-2030, F: 02-786-2017, E: themirae2030@gmail.com

웹사이트: themirae.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themirae

블로그: blog.daum.net/themirae2030
